

받아쓰기 보도, 이대로 괜찮나



관련 기사 보기

받아쓰기는 게으른 보도의 전형... 취재원 발언 검증 · 해석해야

정준희／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언론학을 공부했지만 기자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기자라는 직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학교를 다니던 당시만 해도) 너도나도 선망하는 최고의 직업 가운데 하나라서였다. 기질이 좀 비뚤어져서 그런지, 누구나 원하는 길에 나도 당연한 듯 뛰어들고 싶진 않았다.

그래도 내심 현장 기자들에게서 느꼈던 ‘메모 적기’의 경이로움과 함께 그 전문 역량에 대한 선망은 있었다. 인터뷰 상대에게 눈을 맞추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그가 쏟아내는 어지러운 말 속에서 요체만을 뽑아 노트에 옮기는 공력. 그리고 자신이 적은 노트를 보며 인터뷰 상대자가 했던 말을 마치 녹취라도 한 양 되살려내는 엄청난 기억력.

기자의 전문 역량 ‘메모 적기’

말의 향연과 자료의 홍수 속에서 사실과 의견을 분별하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은 물론 그에 연관된 온전한 기록까지도 남길 수 있다는 건, 기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스스로 기자도 아니었고 기자가 될 꿈도 꾸지 않았지만, 품 안에 기자수첩 하나쯤은 꼭 챙기고 다녔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정확히 기록·저장·소환해낼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해도 참과 거짓, 유용한 정보와 무용한 정보를 가르는 역량은 여전히 정보를 다루는 모든 직업에 요구되는 차별화된 전문성이라고 봤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문득 둘러보니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다. 수첩에 메모를 적던 기자들의 능숙한 손짓은 어디서든 펴질려 앓아 노트북 자판을 두들겨대는 속기사의 그것으로 대체됐다. 노트북을 쓸 수 없을 경우, 혹은 매체의 특성상 음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엔 녹음기가 있다. 심지어 이젠 녹취 전용 녹음기도 아닌, 개인 스마트폰을 인터뷰 상대자의 입에 갖다대는 모습이 일상다반사가 됐다. 기자와 전화를 할 경우엔 녹음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TV 보도 프로그램이나 시사 라디오 방송은 매일 주요 정치인과의 대담을 거의 그대로 옮긴 내용을 온라인

기사라며 올린다. 이미 남들이 기록해놓은 내용을 펴다 쓰는 일도 흔하다. 주요 정치인과 유명인들이 앞다퉈 자신의 발언을 SNS에 올리고 있고, 그런 화면을 그대로 떼어 오거나 ‘긁어서’ 붙이는 일이 저널리즘적 생산과 편집의 상당 부분을 구성한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변형·재기록되고 있다. 이런 세계에서는 정보가 곧 전자적 기록과 동의어며, 기자는 기록하는 자, 아니 전자적 기록 장비를 다루는 자다. 냉정히 말하자면, 정보의 기록과 재생 측면에서 기자를 일반인과 구별 짓게 하는 건 여간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과의 ‘근 거리’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는 점과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뉴스라는 형식으로 공식화할 매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기록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그 기록을 소환 및 새로운 정보로 편집하는 과정에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거나 즉답을 유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술 변화가 이끌어낸 변동의 산물

나는 이것이 우리 뉴스 환경의 주축을 구성하게 된 ‘받아쓰기 보도’와 ‘따옴표 저널리즘’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덜떨어진 몇몇 기자의 게으름이 빚어낸, 개탄해 마지않을 관행이 아니다. 관찰해보건대 이 현상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가 이끌어낸 저널리즘 산업구조 변동의 산물이며, 불행히도 상당 부분 불가역적인 것이다.

온라인 전달과 소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돼 있는 상태에서는 더 많은 기사, 더 많은 클릭이 필요하다. 일선 기자들은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기사를, 더 자주 클릭(혹은 터치)할 수 있도록 생산 해야 한다. 따라서 한 손엔 펜, 다른 한 손엔 기자 수첩을쥔, 아날로그 시대의 고색창연한 기자상을 되살리자고 말한다고 해서 현실의 기자들을 받아 쓰기 보도로 내달리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 환경과 저널리즘 산업 조건이 바뀌지는 않는다. 여전히 더 많은 기록이 생산될 것이고, 기록과 기사의 경계,

“
누군가의 발언을 기사로 바꾸는 행위에서 저널리즘의 끝으로 남는 두 가지 핵심 절차가 있다.
그 하나는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저널리스트가 목적을 갖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사후 검증과 교차 검증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독자적인 해석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한 기사는 고작해야 ‘발언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결과물일 뿐이다.”
”

선후관계를 섞어버리는 따옴표 저널리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구조,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추세에 주목하다 보면 상황을 냉정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처방과 실천 측면에선 회의론과 무기력감만 남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받아쓰기 보도’라는 명명을 통해 부정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 그 부정성을 교정 할 수 있는 당위적 처방과 현실적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점부터 짚어보자.

첫째, 받아쓰기 보도는 게으른 보도의 전형이다. 저널리즘 행위는 사실을 발굴·검증·취합해 가능하다면 적절한 분석을 거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socially relevant) 정보로 바꿔내는 과정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다.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의 단순 발굴과 재생산이 뉴스를 구성하지 않는다. 개별 사실의 사실성을 해치지 않는 한 그런 사실의 취합과 재현(representation)으로서의 뉴스 정보는 반드시 내용적·편집적 판단(editorial decision)을 거쳐야 하며, 바로 그곳에서 ‘정보성(informativeness)’과 ‘뉴스성(newsworthiness)’이(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뉴스로서의 부가가치가) 산출된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아무런 부가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단순 인용기사(flat quotes)는 기사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며 정당한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 시민 저널리즘의 모토인 ‘누구나 기사를 쓸 수 있다’는 발언이 유효하려면 누가 쓰든 그 결과가 ‘기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게 기사라면 아무나 기사를 쓸 수 있겠다’는 말이 나온다는 건 받아쓰기 보도가 독자적 직업 영역으로서의 저널리즘을 봉괴시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다.

받아쓰기는 게으른 보도의 전형

둘째, 받아쓰기 보도는 무책임하고 무신경한 보도로 이끈다. 정치인 등 특정인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는 고작해야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는 데서 사실성과 객관성, 현장성을 확보할 뿐, 그 발언이 지목하는 바에 관련된 사실성과 진실성까지 담보 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발언을 기사로 바꾸는 행위에서 저널리즘의 끝으로 남는 두 가지 핵심 절차가 있다. 그 하나는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은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라 저널리스트 등이 목적을 갖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발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과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을 현장에서 짚고 되묻는 과정 아래 배치돼 있어야 하며, 사후 검증과 교차 검증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독자적인 해석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끝을 감당하지 않은 저널리스트,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한 기사는 고작해야 ‘발언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결과물일 뿐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런 기사가 발언자의 의도와 입맛을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정치적 발화자는 정치적 수사라는 이름으로, 의도를 갖고 사실을 조작하거나 변형한다. 그런 발화의 목적이 자기 발화의 전파 자체에 있는 한 받아쓰기 보도는 (상당 부분 악의를 내포한) 발화자의 스피커로 활용될 따름이다.

셋째, 받아쓰기 보도가 악의적 발화자의 스피커가 되는 것은 ‘이용당하기’를 넘어 ‘역으로 이용하기’ 혹은 심지어 ‘공모하기’로까지 이어진다. 받아쓰기 보도를 수행하는 모든 기자들이 그저 순진하고 게으른 것만은 아니다. 그중에는 명민할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목적의식을 가진 부류도 있다. 악의적 발화자에게 ‘이용당하는’ 받아쓰기 보도의 경우와 달리, 그들은 (기자)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를 발화자의 입을 통해 얻어낸다. 광의의 받아쓰기 보도 유형 가운데서도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지칭할 만한 보도가 여기에 속한다. 기사 전체가 발언을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한 경우와 달리, 기사의 전반을 구성해가면서 요소요소마다 특정 발언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형태다. 물론 전자나 후자나 결국은 따옴표에 의존하지만, 그 의존의 정도나 양상을 구별해볼 필요는 있다. 따옴표 저널리즘은 일종의 ‘복화술’ 저널리즘이다. 발언은 실제로 그 기사를 쓴 자가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입을 빙긋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기사

속에 인용돼 있는 발언자다. 그러나 그는 복화술사의 인형에 불과하다. 자신의 흔적을 지워 객관성과 권위를 확보하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책임 논쟁을 회피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저널리즘 형식인 셈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발화자와 그의 발언을 동시에 배치하는 기사 제목 형식이 유난히 많은 편인데, 이는 저널리스트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발언자를 통해 전달하는 전형적이고 효과적인 형태다.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한국 저널리즘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취재자와 취재원 사이의 밀접한 관계, 특히 정치적 동행관계 (political parallelism)의 지배적 양상을 고려할 때, 이들은 어느 쪽으로든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기보다 서로 ‘공모’하는 관계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많은 저널리즘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특정 출처 혹은 취재원에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기자와 기사는 게으르거나 진의를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뉴스 이용자도 ‘보이콧’해야

문제가 이러하다면, 대체 어떻게 이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인가?

뉴스 생산자 측면에서 봤을 때, 대개 받아쓰기 보도는 부끄러운 일이며, 의도적 따옴표 저널리즘은 비열한 행위라는 점을 윤리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적어도 기사 제목으로 따옴표 저널리즘 양식을 채택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옳다는 자체적인 데스킹 기준도 필요하다. 윤리는 강제 규정보다는 비난과 망신이라는 ‘평판’ 시스템에 의해 실효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저널리즘 비평을 통해 ‘확실한 문제로 보이는’ 받아쓰기 보도와 따옴표 저널리즘을 수시로 지목하고 공개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 이유에서든 다른 연유로든, 이와 같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비난과 망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산자들은 여기 저기 널려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의식적으로

명분과 현실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한다. 본디 세상은 그렇게 말끔하지 않은 법이다. 한국 저널리즘의 핵심 문제는 이와 같은 윤리와 실천 사이의 이중구조가 너무나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는 데 있고, 이 정도 수준의 간극을 당연한 것으로서 솜씨 있게 다뤄내는 ‘지혜’가 업계에서의 ‘업력’을 반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관행에 있다. 그 간극이 적은, 소위 상위시장 (upmarket) 행위자와 그 간극으로부터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는 일종의 블랙마켓 속의 하위시장 (down-market) 행위자가 도통 구별되지 않으며, 시장의 분리가 아닌 혼성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분명 우려할 만한 일이다. 아니 할 말로, 망해가기 경쟁 속의 이득 추구는 상급과 하급을 가리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득을 얻겠지만 봉괴의 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질 따름이다.

뉴스 소비자의 문제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당분간은 제목에 따옴표를 단 기사만큼은 클릭하지 않는 방식의 뉴스 소비를 통해서라도 작은 반전의 계기는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받아쓰기 보도와 따옴표 저널리즘을 경계하는 뉴스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적·산업적 환경을 새로운 형태로 조성할 필요도 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따옴표 저널리즘의 변형은 계속될 것이고, 순수운 기사 작성자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낚시성 기사는 진화를 거치며 양산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유지되고 저널리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양질의 저널리즘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다. 그런 수요를 아직까지 ‘가수요’ 형태로만 남겨두고 있는 것은 결국 생산자의 잘못이며, 뉴스 소비와 유통 환경의 문제다. 스스로를 (단순히 선별적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 소비자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들을 조직화할 동력이 필요하다. 가수요를 실수요로 바꾸어내는 일, 그곳에 작은 돌파구가 있다. ■